

6월 민주항쟁과 기록

홍계신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

1987년 6월민주항쟁은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그 계기가 되었다. 1987년 1월 14일, 경찰은 서울대생 박종철을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 불법 연행하여 고문하다가 사망케 했다. 경찰은 “책상을 ‘탁’ 치자 ‘억’하고 쓰러졌다”며 단순 쇼크사로 발표했다. 그러나 물고문의 심증을 굳히게 하는 최초 검안의 오연상의 증언과 부검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자 경찰은 사건 발생 5일 만에 물고문 사실을 공식 시인하고 고문 경찰 조한경과 강진규를 구속했다. 이 고문살인사건의 진상이 폭로되면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불붙기 시작했다. 대학가와 사회·종교단체는 성명을 발표하고 추도시위 및 농성을 벌였다.



I

6월
민주항쟁

박종철 고문사망과 추모시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김근태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85년 발족한 ‘고문 및 용공조작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2월 7일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와 3월 3일 ‘고문추방 민주화 국민평화대행진’을 개최한다. 경찰은 두 집회를 불법집회로 간주하고 대회를 원천봉쇄 했으나 시위는 전국 동시다발 형태로 추진되었다. 시위 현장에 시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시민들은 시위 대열에 박수를 보내거나 적극 합류했다. 2.7추도회와 3.3평화대행진을 통해 많은 국민은 전두환 정권의 폭압을 뚫고 민주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두 대회는 6월민주항쟁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1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안내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고문정기 나라에서
살고싶다”



“아부지는
아무 할말이 없대이”

일시 : 1987년 2월 7일 (토) 오후 2시
장소 : 명동성당 문화관
주최 :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회 준비위원회

고문 : 강석주 김대중 김수환 김영삼 김제형
김지길 윤반웅 이민우 이희승 지학순
함석헌 홍남순

공동위원장 : 강문규 계훈제 고영근 고은 김명운 김승훈
명노근 문정현 박영록 박영숙 박용길 박종태
박형규 백기원 백기형 서경원 성내문 송진호
신현봉 양순직 유인호 유현석 윤희표 이돈명
이소신 이우정 이경숙 이태영 임기만 장율병
조남기 조홍을 지신 진관 최형우

2월7일은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의 날입니다

521083

경찰은 “책상을 탁 치자
‘억’하고 쓰러졌다”며
단순 쇼크사로 발표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

시가온 날
한 번의 무덤조차 없이
연장 준비할 속으로 날리진
철야,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동지여,
누가 너를 잊어갔는가
강히 누가 너를 죽였는가
이제는 끝내주리라
이제는 끝내주리라
(서울대 언어학과 동료들의 「추모시」 중에서)

•2월7일 고 박종철군 국민추도날에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 오류 2 시 온 국민은 있는 자리에서 추도복음을 합니다.
- 추도의 피복(검은색, 흰색)을 달고 꽃만송이를 헌화합니다.
- 오류 2 시 모든 자동차는 있는 위치에서 경적을 울리고, 모든 교회와 사찰은 타종을 합니다.

•추도준비위원의 뜻이 입으신 분들은 고문추방운동에 필요한 기금이헌을 위해 헌혈비를 다음 구하여 부탁드립니다.

예금통장: 김승훈	계좌번호: 125-10-008094
연락처: 007-01-192541	서울신대은행: 14701-00000479
국민은행: 008-01-0285-766	소용은행: 325-11-042951
민심은행: 012-01-139078	상업은행: 104-05-043030

연락처: 신민당, 민주화운동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경성구, 민중불교운동연합, 민청련

군부독재 끝장없이 고문수사 끝이없다!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대통령 전두환은 ‘4.13호헌’ 선언으로 맞섰다. 전두환의 4.13호헌조치는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인 듯 거센 호헌철폐투쟁을 불러일으켰다. 4.13호헌 발표 당일부터 사회단체들의 시국선언이 줄을 이었다. 천주교 사제들과 개신교 목회자들의 단식기도가 이어졌고 불교계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큰 호응을 얻어 호헌철폐운동을 고양시킨 기폭제가 되었다. 해외에서도 교포들과 유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1987년 5월 18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광주민주항쟁 제7주기 미사’에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 김승훈 신부는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제목의 글을 읽었다. 이 성명은 범인을 축소 조작 은폐하였으며, 거기에 가담한 실무자들의 구체적인 명단과 역할, 검찰이 사실상 묵인한 것과 강민창 치안본부장 개입의혹 등을 적시했다. 결국 검찰은 고문살인의 범인이 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축소 조작을 주도한 박처원, 유정방, 박원택을 구속 수감했다. 치안본부장 강민창은 88년 1월 25일, 부검의 황적준의 일기장이 근거가 되어, 허위 감정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직권남용과 사인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사제단의 폭로로 전두환 정권은 그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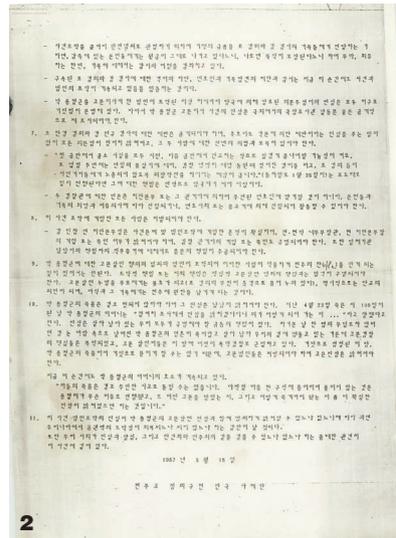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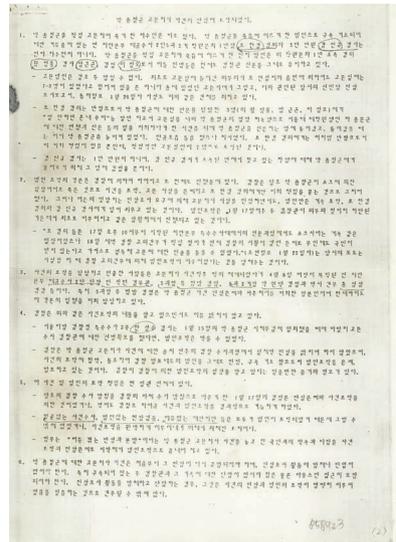
6월민주항쟁의 전개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5월 27일 6월민주항쟁의 구심점 역할을 할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가 결성되었다. 국본은 민정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 날인 6월 10일에 전국 동시다발로 ‘고문살인 은폐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이하 6.10 국민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6.10국민대회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6월 9일 연세대 시위 과정에서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학생들이 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이한열은 의식을 잃었

천주교 사제들과 개신교 목회자들의 단식기도가 이어졌고 불교계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은 큰 호응을 얻어 호헌철폐운동을 고양시킨 기폭제가 되었다. 해외에서도 교포들과 유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2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성명



- 3 6.10국민대회
 (©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4 민정당 제4차 전당대회 및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
 (©정태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다. 학생들과 시민들은 이한열이 사경을 헤매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한열은 결국 7월 5일 사망하였으며 9일 수많은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1) 6.10국민대회와 명동성당 농성투쟁

1987년 6월 10일 두 개의 대회가 열렸다. 잠실체육관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민정당 제4차 전당대회 및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열렸다. 대통령 전두환과 차기 대통령선거 민정당 후보로 지명된 노태우는 손을 맞잡고 환호했다.

반면 전국 각지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열기가 분출되었다. 경찰은 6.10국민대회를 막기 위해 대회 장소인 성공회대성당을 봉쇄하고, 전국에 경찰병력을 배치했다. 그러나 봉쇄를 피해 미리 성당에 들어가 있던 국본 간부 20여 명은 '4.13호헌조치에 의한 대통령 후보 선출은 무효'라고 선언한다.





5 명동성당농성(©박용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 6.26국민평화대행진(©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7 노동자대투쟁(©경향신문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10국민대회는 정치인들과 재야인사,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위 투쟁을 벌였다.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였으며, 주요 도시에서 많은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 “호헌철폐, 독재타도”의 함성이 전국에 울려 퍼졌다. 6.10국민대회는 전국 22개 도시에서 시민들이 대규모로 참여한 가운데 격렬하게 전개되었다.

이어 6월 10일 밤부터 6월 15일까지 계속된 명동성당 농성투쟁과 벵타이부대를 주력으로 한 시민들의 시위는 6.10국민대회를 6월민주항쟁으로 진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2) 범국민 대규모 투쟁 전개

6월 18일의 최루탄추방대회는 이한열 최루탄 피격사건이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이날 대회는 전국에서 6.10국민대회보다 많은 수의 국민들이 참가했다. 전국적 시위는 일요일인 6월 21일까지 지속되었다.

6.26국민평화대행진은 이제까지의 범국민 투쟁을 총결산하는 대규모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시위 진압에 나섰던 경찰들은 견잡을 수 없이 늘어만 가는 시위대의 위세에 밀려 속수무책이었다. 이날 대행진은 이제까지의 범국민 투쟁을 총결산하는 대규모 투쟁으로 전개되었다. 이날의 시위는 6월 민주항쟁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시위는 27일과 28일에도 계속되었다.

3) 6.29선언, 직선제 개헌 쟁취

국민의 저항에 직면한 정권은 결국 6·29선언을 발표한다.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한다.'는 내용의 6.29선언을 발표한다. 직선제 개헌이 쟁취되면서 정치권은 선거로 달려갔고, 전국을 뒤끓었던 투쟁 열기는 급격히 수그러들었다.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
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한다.'는
내용의 6.29선언을
발표한다.

하지만 8월 29일경부터 공권력이 적극 개입하면서 투쟁의 파고는 9월부터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소강상태로 빠져든 8월 말부터 운수·광산·사무·판매·서비스·기술직 등 비제조업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9월 이후 계속되었다. 노동자대투쟁을 통해 많은 노동조합이 새로이 조직되었다.

여당인 민정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이 합의하여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이 마련되었고 국민투표를 거쳐 10월 29일 헌법이 공포되었다.

12월 대통령선거에서 대다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김영삼과 김대중이 단일화에 실패하고 각각 출마하면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2월 대선은 지역주의가 투표 성향을 압도적으로 지배했다. 지역주의는 우리 사회 정치적 민주주의의 질곡을 가져왔다.

그러나 연인원 400~5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6월민주항쟁은 정치와 사회 각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이후 자유와 민주주의, 남북화해와 통일의 큰 길을 열었다.

6월민주항쟁의 성과와 한계

6월민주항쟁의 결과 6.29선언이 발표되었고, 이를 통해 직선제 개헌은 관철되었지만 기층 민중들의 요구는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노동자들은 생존권 확보 및 노동조합 결성에 나섰다.

7월 5일 울산 현대엔진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투쟁을 시작으로 전개된 노동자대투쟁은 울산, 마산, 창원의 대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부산과 거제 등지로 확산된 파업투쟁은 수도권의 중소기업·비제조업 등으로 확산되어 갔다.



II

6월
민주항쟁과
기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되었다. 민주화운동 역사정리를 하기 위해 설치된 사료관은 현재 85만여 건의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을 소장하고 있다. 사료관 소장 기록은 크게 문서 기록, 음성·영상 기록, 사진·필름 기록, 박물 기록, 구술 기록으로 분류된다. 기록물은 사료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리, 등록, 원문구축 등 전산화 작업을 통해 오픈아카이브(<http://archives.kdemo.or.kr/>)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6월민주항쟁 관련 기록물 현황

사료관 소장 기록은 대부분 기증에 의해 수집된 기록이다.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원회나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등 대규모 기록물 소장 기관으로부터 이관된 기록물도 있지만, 개인과 단체 등이 기증한 기록이 많다. 사료관은 기증자를 그룹으로 기록을 정리하는데 그룹 내 출처가 다양하고, 원질서가 무질서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분류	문서	사진	영상	박물	합
박종철	959	253	6	1	1,219
이한열	240	444	4	0	688
6.10국민대회	95	19	0	0	114
4.13호헌	170	2	0	0	172
국민운동본부	3,064	83	2	8	3,157
국민평화대행진	150	24	0	0	174
6.29선언	248	10	0	0	258
노동자대투쟁	1,332	4	4	0	1,340

표1 6월민주항쟁 기록물 소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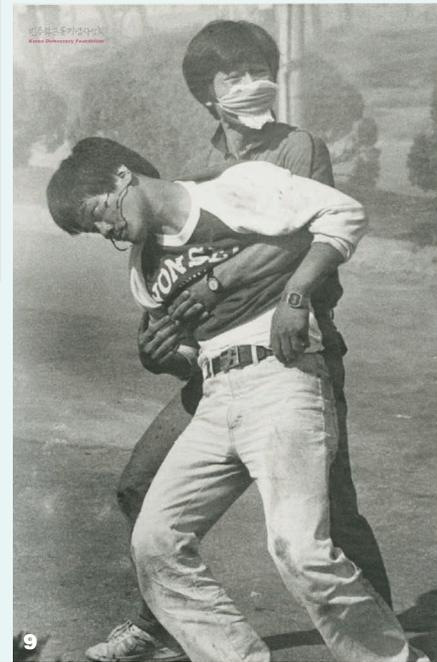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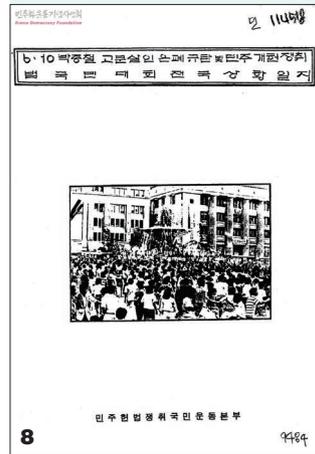
사료관은 검색어를 이용한 단순검색만으로는 기록의 총체성이 부족하여 민주화운동 주요 사건별, 시기별로 정리하여 내용 설명과 함께 주요 기록물을 보여주는 사료 컬렉션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사료 컬렉션 서비스는 현대사 연구자들이 민주화운동 기록을 바탕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분류	주제(사건)
6.10민주항쟁	박종철고문치사사건
	이한열최루탄피격사건
	6.10항쟁
	4.13호헌조치철폐투쟁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명동성당농성사건
1980년대	6.26국민대행진
	7.8월노동자대투쟁

표2 6월민주항쟁 사료 컬렉션

6월 민주항쟁 기록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문서 기록이다. 문서기록은 국본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 등 사회단체와 민주협과 야당에서 생산한 성명서, 자료집, 회의록, 집회 상황을 정리한 기록 등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문서 기록을 통해 국본 참여자 명단, 정책 결정과정, 전국 시위 상황 일지, 각 단위 활동 과정, 시위 연행자 명단, 해외 운동 현황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영상기록은 저작권 및 사용권이 해결되지 않아 등록 및 서비스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진 기록은 당시 생생한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및 사용권이 해결된 기록을 우선 등록하고, 주제별, 사건별로 분류하여 사진 아카이브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사진은 민통련 보도실장을 맡아 전국의 집회 현장을 뛰어다니며 기록한 박용수와 로이터통신 정태원 기자가 촬영한 사진, 경향신문사 사진을 정리, 서비스하고 있다. 박용수 선생 사진은 박종철 사건, 국본 활동, 6월 민주항쟁 시위 현장, 이한열 열사 장례식 등 6월민주항쟁 전 과정을 보여준다. 정태원 기자는 이한열 열사 피격 당시 현장을 카메라에 담았다. 사진 기록은 민주화운동의 뜨거운 열기와 함성, 용솟음치는 기억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 8 6.10국민대회 전국상황일지
- 9 이한열 피격(©정태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2017년 6.10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박종철고문치사사건과 4.13호헌조치, 각 지역의 6.10민주항쟁 과정의 주요 사건과 국본 참여인사 113명(약 230시간)의 구술을 수집하였다. 구술은 서울, 부산 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가두시위가 벌어진 제주지역을 비롯하여 강원지역 등의 6월민주항쟁 이야기와 노동자·농민·학생의 생생한 투쟁 이야기 등이 담겨있다. 또한 사제단의 박종철 고문사망 은폐조작 폭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김정남의 63시간 생애사 구술 기록에도 6월민주항쟁의 주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사료관 소장 기록은 영화 1987을 제작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었다. 영화제작팀은 사료관 소장 기록물(특히 김정남 구술과 사진, 영상 기록)을 시나리오 작업과 당시 현장을 재현하는 자료로 활용하였다.

III

연구과제

6월민주항쟁 관련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연구도 주로 신문기사와 민간기록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와 정당,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과 정당의 1차 기록에 기초한 연구는 거의 없다. 1차 기록들이 보존되어 있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증언에 의지하거나 회고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로 수사 축소, 은폐 의혹을 받고 있었다. 박종철의 유족은 서울중앙지검에 고문 경찰관 등의 재판·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여기에는 당시 검사·판사·변호사·피의자 등이 공판에서 나는 대화가 적힌 공판조서와 공소장, 재판의 증거로 채택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사건 관계자의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이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은 리스트 등 일부 문서만 공개하고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수사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던 과정과 박 후보자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기록이 누락된 것이다. 결국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박상옥은 대법관에 임명되었다. 이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특수기록관으로 특수한 대접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등 권력기관의 기록은 거의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 활용할 수가 없다. 권력기관의 기록이 투명

하게 관리되고, 공개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혁하여 통제해야 한다.

4.13호헌, 비상조치와 군 출동 검토, 6.29선언을 둘러싼 대통령 전두환과 내각, 집권여당인 민정당의 움직임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실제 전두환은 비상조치와 군 출동을 검토하였고 이를 둘러싸고 권력층은 강·은 의견이 충돌하며 긴박하게 움직였다. 결국 6.29선언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내각, 정당 기록이 부실하거나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6월민주항쟁에서는 미국의 역할과 관련한 미국 측 기록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미국은 사태가 긴박해지자 6월 19일에는 릴리 대사를 통해 레이건의 친서를 전두환에게 전달했다. 20일 미 국무차관 더윈스키가 방한한 것에 이어 23일 미 국무부 동아시아 정책실무 최고 책임자인 시거 차관보가 내한해 군 출동 반대 의사를 밝히고 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군의 작전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두환 정권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항배는 군 출동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군 출동 문제 등 6월민주항쟁 과정에서 미국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의 수집과 연구가 필요하다.

IV 맺으며

우리 사회의 진실 규명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 부분 기록의 부실 및 부재와 직결된다. 우리 사회는 기록의 부실 및 부재로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의 진실이 상당 부분 은폐되어 있다. 우리 정부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을 우리의 기록이 아닌 외국의 기록물 공개를 통해서야 확인하는 상황이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5.18 발포명령을 둘러싼 문제도 전두환과 노태우가 증언과 회고록을 통해 6.29선언을 서로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아이러니도, 4대강과 자원외교를 둘러싼 권력의 부패와 비리문제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문제도 우리 사회 기록의 부실과 부재에서 오는 것이다.

기록은 후대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권력이 공적이고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현재 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록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아카이브는 단지 과거의 기록을 보존하는 장소가 아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당대 중요 기록을 선별하여 미래로 전승하고, 연구자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아키비스트는 우리 사회를 읽어낼 수 있는 중요 기록을 남겨야 하며, 기록에 대한 과학적 정리와 기술, 다양한 검색도구의 개발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기록관리의 정착은 민주주의 제도와 민주적 가치가 전 사회에 확산하는데 기여한다. **IN**

기록은 후대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권력이 공적이고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현재 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록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필자소개

사학(고려대)과 기록관리학(명지대)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으로 재직 중이다.